

민주연구원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입법기반 구축과 향후 추진 과제'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7월 1일(수),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입법기반 구축과 향후 추진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은 수도권 1극 집중 추세 완화를 위해, 권역별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통합·연합하여 지역이 자립하여 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라며,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부처별 공모사업과 시·도 단위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권역 전체의 산업·교통·인재 전략을 묶어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주도 균형성장 전략이 정책·예산·재정·법제 등 주요 영역에서 추진체계가 준비되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적 의미를 밝혔다.
- 첫째, 기존 초광역 사업 추진은 여러 부처 공모에 개별 지자체가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많아 권역 전체의 전략성과 지속성이 낮은 경우가 다수였으나, 이번 개정법은 초광역특별협약과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를 강화하고 초광역협력사업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둘째, 이번 법 개정은 국정기조의 일관된 추진의 결과로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방주도성장의 입법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1일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비통합 권역

에서도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 셋째, 향후 권역별 추진 주체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초광역 전체에 효과가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진행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주민 합의를 제도화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렸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핑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환영하며,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자 작성되었다”고 덧붙였다.